

2018년 4월 7일 국가직 9급 사회 (가)형 해설

한수성 사회

<총평>

올해 국가직 사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과 정치 10문제, 경제와 사회·문화가 각 5문제 씩 출제되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법과 정치 영역의 '선거 관련 자료 분석 문제(가형 3번)', 경제 영역의 '고용 관련 지표 문제(가형 20번)'의 경우 내용 자체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묻고 있지만 자료 해석이나 수치 계산 과정을 요구하여 시간적으로 수험생을 곤란하게 만들었으리라 예상됩니다.

법과 정치는 2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정부형태-가형 1번, 선거관련 문제-가형 3번·5번), 법과 정치 5단원의 형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도 두 문제가 중복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6단원 국제 정치에 대한 부분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2단원 이후의 내용을 골고루 출제하였으며, 고용 관련 지표(가형 20번)를 묻는 문항 외에는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수험생을 괴롭힐 만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회·문화 영역의 경우 계층 자료 분석 문제(가형 15번)가 출제되었으나 계층 이동을 묻는 것이 아닌, 계층별 구성원 비율을 가지고 계층 구조만을 물어 상당히 보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평이한 문제로 평가됩니다.

국가직 적중 특강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직 사회 문제는 다른 시험과 달리 생소한 내용보다는 평소에 접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을 마지막에 확실히 숙지하고, 자료 분석 문제도 고난이도 문제보다는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를 기출 중심으로 숙지하여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쯏 시험을 치루신 모든 수험생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100 기원합니다.

-2018년 4월 7일 한수성-

1.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행정 각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 ②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법과 정치 2단원]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

[정답] ③

[해설]

의원 내각제는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융합적인 성격을 띠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상호 융합적인 성격을 갖는 제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즉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국무 위원직을 겸직하거나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혼합형 정부 형태>

	원칙(대통령제 요소)	예외(의원 내각제 요소)
요 소	·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 회의 ·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 등의 국회 출석 발언권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국회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 가능 ·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 ① (X)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 제도는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② (X)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국무 위원직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③ (O)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④ (X)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2. 다음은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한다.
을: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인하여 야수적이며 단명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 ① 갑: 일반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 ② 갑: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정이다.
- ③ 을: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 ④ 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2. [법과 정치 1단원] 사회 계약설의 학자별 비교

[정답] ④

[해설]

갑(=루소): 갑은 일반의지에 입각한 정치 공동체를 주장한 루소의 주장입니다.

을(=홉스): 을은 자연 상태에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권리를 전부 양도하여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국가를 구성하고자 한 홉스의 주장입니다.

- ① (X) 일반 의지란 공공선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사로 소수의 의견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의사가 됩니다.
- ② (X) 루소는 구성원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입헌 군주제는 헌법에 입각한 민주적인 통치를 전제하지만 명목상의 군주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루소와의 견해와는 배치됩니다.
- ③ (X) 사회 계약설은 공통적으로 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됨을 전제합니다.
- ④ (O) 사회 계약설은 공통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의 내지 합의(사회 계약)에 따라 국가를 구성하였음을 전제합니다.

3. 다음은 갑국의 2017년 국회의원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구 당선자 수 및 정당 득표율>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명)	정당 득표율(%)
A	98	43
B	42	32
C	24	15
D	36	10

<조건>

- A, B, C, D 소속 후보들만 국회의원선거에 참가하였다.
- 1인 2표제를 통하여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였다.
-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득표가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였다.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으며, 정당 득표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 반올림하여 산정하였다.

- ①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4년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선거 선거구제와 동일하다.
- ②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 ③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A ~ D 중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 ④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B와 D의 정당 득표율 합보다 더 크다.

3. [법과 정치 2단원] 선거 결과 자료 분석

[정답] ④

[해설]

- ① (O)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가 적용되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갑국도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득표가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므로 중선거구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② (O) 갑국은 중선거구제를,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이 선출됩니다. 소선거구제에 비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될 수 있는 중선거구제가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에 더 유리합니다.
- ③ (O) 다수당인 A당 마저 141석으로, 300명의 과반수인 151명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갑국의 정당별 국회의원 수>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 (200명)	비례대표 당선자 수 (100명)	합계 (300명)
A	98명	43명	141명
B	42명	32명	74명
C	24명	15명	39명
D	36명	10명	46명

- ④ (X)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39%로, B와 D의 정당 득표율 합인 42%보다 더 작습니다.

5.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수준으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유권자 한 명당 갖고 있는 투표권의 가치가 거주 지역마다 다른 지금의 현실이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현재는 2001년 결정을 통해서도 “조만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더 줄여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 ① 국회의원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② 선거구획정에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하였다.
- ③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과소대표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 ④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5. [법과 정치 2단원] 선거구 법정주의

[정답] ③

[해설]

- ① (X) 선거구 법정주의는 평등 선거 원칙을 강화하여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 ② (X) 인구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 비례가 지켜지도록 하여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역의 의사와 특성을 살린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으로, 행정 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인구 대표성을 강조하면 지역 대표성은 약화되는 반면, 행정 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을 부각시키면 오히려 인구 대표성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조화로운 선거구 획정이 바람직하나,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라면 평등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인구 대표성이 우선합니다.
- ③ (O)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너무 클 경우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과소 대표될 수 있으므로 헌법 재판소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여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 만약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극단적으로 A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1명이라면 그 1명의 유권자가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기에 유권자 1명의 의사가 곧 선거 결과가 됩니다(최소 선거구 → 과대 대표 문제 발생). 그러나 유권자 수가 2명 이상인 B 선거구에서는 다른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어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 가치는 상대적으로 과소해집니다(최대 선거구 → 과소 대표 문제 발생).

- ④ (X)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 선거구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확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선거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제시문에서도 헌법 재판소는 국회에 대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자기 소유의 A아파트를 을에게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갑은 10일 후 을에게서 중도금 1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잔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다.

- ①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서 A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② 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인무가 없다.
- ③ 을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6. [법과 정치 4단원] 부동산의 매매 계약

[정답] ①

[해설]

- ① (X)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을이 A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O) 공시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O)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는 누구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을은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을이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져 돌려받지 못합니다.
- ④ (O)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사는 갑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을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을을 폭행하였다. 갑의 폭행으로 을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기>

- ㄱ.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갑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 ㄴ. 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원고가 될 수 있다.
- ㄷ.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ㄹ. 갑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7. [법과 정치 5단원]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정답] ④

[해설]

- ㄱ. (X) 갑과 을이 민사상의 합의를 거치더라도 이는 형사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ㄴ. (X)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가해자인 갑입니다. 피해자인 을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때 갑을 형사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민사 재판의 당사자는 원고 을과 피고 갑이 됩니다.
- ㄷ. (O) 을은 형사 고소 이외에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갑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ㄹ. (O) 모든 피의자,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 27조 제2항).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무죄의 추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8. 다음 사례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갑이 저녁식사를 한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TV가 갑자기 폭발하였다. 이 폭발로 갑은 얼굴에 파편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거실에 있던 골동품이 파손되었다. 이에 갑은 TV 제조자인 회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①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 ②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 ③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 ④ 회사 을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TV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8. [법과 정치 4단원] 제조물 책임법

[정답] ③

[해설]

제조물 책임법 상 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면책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의 고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법령을 준수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 ① (O)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 ② (O)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 ③ (X)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설령 결함을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④ (O) 회사 을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TV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
-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 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없음

9. [법과 정치 4단원] 형사 절차

[정답] ①

[해설]

- 첫 번째 제시문 (O):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구속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제시문 (X):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 유예를 통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제시문 (X):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및 상고,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 및 재항고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합니다.
- 네 번째 제시문 (X):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지휘합니다.
- 다섯 번째 제시문 (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무사히 경과한 때에는 면소로 간주됩니다.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란 집행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0. [법과 정치 4단원] 헌법 재판소

[정답] ②

[해설]

- ① (O)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제111조 제2항).
- ② (X) 헌법 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 법률 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할 권한이 법원에 있습니다.
- ③ (O)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헌법 제65조 제3항).
- ④ (O)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가), (나)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가) 서유럽에서 발달한 목축업은 유럽인들의 식생활, 의복, 주거문화, 예술활동 등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나) 태어난 직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떨어져 살던 일란성 쌍둥이가 키와 얼굴, 운동 및 인지능력은 비슷했지만, 인성이나 규범적 행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 | (가) | (나) |
|-------|-----|
| ① 공유성 | 총체성 |
| ② 총체성 | 학습성 |
| ③ 축적성 | 공유성 |
| ④ 학습성 | 총체성 |

11. [사회·문화 4단원] 문화의 속성

[정답] ②

[해설]

문화의 속성으로는 아래와 같이 5가지가 존재합니다.

학습성	문화는 후천적 학습에 의해 형성됨
공유성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양식
축적성	문화는 세대 간에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짐
총체성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며 전체로서의 의미를 지님
변동성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동함

(가) 총체성: 서유럽에서 발달한 목축업이 유럽인들의 식생활, 의복, 주거문화, 예술활동 등과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문화의 총체성에 속합니다.

(나) 학습성: 유전적으로 동일한 형질의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른 환경을 통해 다른 문화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다른 규범적 행위를 보인다는 것으로, 이는 문화의 학습성과 관련됩니다.

12.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밀 뒤르캄(Emile Durkheim)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그는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와 의례행위가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①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 ②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③ 사회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 ④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12. [사회·문화 2단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정답] ④

[해설]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이 있습니다. 사회 명목론은 개인을 강조하여 사회를 단지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사회 실재론은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를 강조하며, 사회란 구성원 개인의 총합 그 이상의 존재로 이해합니다. 제시문은 뒤르캄의 아노미 이론으로 구조적 관점인 기능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를 더욱 강조하는 사회 실재론과 관련됩니다.

- ① (X) 사회를 단지 개인들의 집합체에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 ② (X) 인간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 ③ (X) 사회 제도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 ④ (O) 사회 실재론은 개인의 능동성보다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13. 다음 일탈이론 (가), (나)에 적합한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누구나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인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일탈자가 생길 수 있다.
 (나) 인간의 행동은 학습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태도와 가치를 학습한 일탈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기>

- ㄱ.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 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 ㄷ.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
- ㄹ. 까마귀 노는 데 백로야 가지 마라.
- ㅁ.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가)

(나)

- | | |
|-----------|---------|
| ① ㄱ, ㄴ | ㄷ, ㄹ, ㅁ |
| ② ㄱ, ㄴ, ㄷ | ㄹ, ㅁ |
| ③ ㄴ, ㄷ | ㄱ, ㄹ, ㅁ |
| ④ ㄴ, ㄷ, ㄹ | ㄱ, ㅁ |

13. [사회·문화 2단원] 일탈 이론

[정답] ③

[해설]

· (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 (가)는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일탈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적 수단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ㄷ.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

· (나) 차별적 교제 이론: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으로 차별적 교제 이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탈자와의 교제를 통해 일탈을 학습하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ㄱ.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ㄹ. 까마귀 노는 데 백로야 가지 마라./ㅁ. 친구 따라 강남 간다.)

14. 다음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관점은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사회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잡해진 사회는 단순 사회에 비해 구성원들의 적응 능력이 더 높다고 본다.

<보기>

- ㄱ.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ㄴ.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
- ㄷ.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퇴보의 가능성도 잘 설명한다.
- ㄹ. 사회 변동을 순환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14. [사회·문화 6단원] 진화론과 순환론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발전 및 진보의 일정한 방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진화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 ㄱ. (O) 진화론은 서구식 사회를 진보하고 발달된 문명으로 인식하여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 ㄴ. (O)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발전 및 진보라는 바람직한 방향만을 갖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 ㄷ. (X)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퇴보의 가능성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순환론입니다. 순환론은 사회 변동이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고 탄생-발전-쇠퇴-소멸의 양상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ㄹ. (X) 사회 변동을 순환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순환론입니다.

15.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

갑국			을국		
	1980년	2010년		198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하층	50	30	하층	30	50

- ① 갑국은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화였다.
- ② 을국은 2010년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화였다.
- ③ 201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 ④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15. [사회·문화 3단원] 계층 구성원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자료는 중층의 계층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표의 전체 합은 100이라는 점을 통해 중층의 계층 비율도 아래와 같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갑국			을국		
	1980년	2010년		198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중층	30	50	중층	50	20
하층	50	30	하층	30	50

- ① (O) 갑국은 1980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20-30-50)에서 2010년에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20-50-30)로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갑국은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화하였습니다.
- ② (X) 을국은 1980년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20-50-30)에서 2010년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30-20-50)로 변화하였습니다.
- ③ (X) 제시된 계층 구성원 비율만으로는 각국의 사회가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④ (X) 제시된 계층 구성원 비율의 변화만으로는 이것이 복지 제도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을국의 계층 구조가 상층과 하층으로 양극화되었다는 점에서 복지 제도의 필요성이 오히려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어느 논리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16.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이다.
 ㄴ. 생산요소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ㄷ.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6. [경제 4단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정답] ③

[해설]

스태그플레이션은 총공급 감소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도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의 발생 유형>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원인	총수요(AD) 증가	총공급(AS) 감소
영향	호경기시 인플레이션	불경기시 인플레이션 →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 ㄱ. (X)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원인입니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경기가 침체되는 반면 물가는 하락하므로 스태그플레이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스태그플레이션은 1973년 이후에 발생한 석유 파동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정부개입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ㄴ. (O) 총공급 감소로 나타나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 ㄷ. (O) 스태그플레이션은 총공급 감소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물가 상승 현상으로 불황속의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17. 다음은 A국과 B국이 각각 신발과 전화를 1단위씩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나라 간에 생산요소 이동은 없고, 생산비에는 노동량만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구분	A국	B국
신발(1단위)	7명	6명
전화기(1단위)	9명	5명

<보기>	
ㄱ.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ㄴ. 신발 생산에 대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는 B국에 있다.	
ㄷ. B국은 신발 생산에 절대우위가, 전화기 생산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17. [경제 5단원] 무역 발생 이론

[정답] ④

[해설]

무역 발생 이론에는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이 있습니다. 절대 우위론은 표에서 제시된 노동량을 바탕으로 직접 절대 우위를 판단하며, 비교우위론은 별도로 기회비용을 구하여 비교우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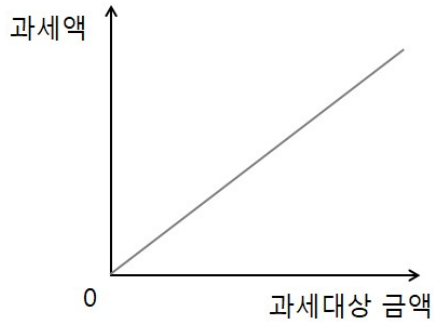
ㄱ. (O) 신발 1단위 및 전화기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량은 두 재화 모두에 있어서 A국이 더 적게 듭니다. 따라서 A국이 신발 및 전화기 생산 모두에 대한 절대 우위가 있으며,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ㄴ. (X) 표에서는 노동량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생산량'이 아닌 '생산 비용'으로 출제된 유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비교우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 비용의 관점에서 기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신발 생산에 대한 비교우위도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A국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A국	B국
신발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전화기 7/9 단위	전화기 6/5 단위
전화기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신발 9/7 단위	신발 5/6 단위

ㄷ. (O) 절대 우위는 신발 및 전화기 생산 모두 A국이 모두 가지며, 신발 생산의 비교 우위는 A국이, 전화기 생산에 대한 비교우위는 B국에 있습니다.

18. 그림과 같은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다.
- ② 누진세 방식이다.
- ③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이다.
- ④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18. [경제 2단원] 세율 적용 방식

[정답] ①

[해설]

<세율 적용 방식>

종류	세율	세액
누진세	증가	누진적 증가
비례세	일정	비례적 증가
역진세	감소	알 수 없음 - 보통 더디게 증가하거나 일정한 세액 그래프 제시됨

제시된 그래프는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할 때 이와 함께 세액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세율이 언제나 일정한 비례세를 의미합니다.

- ① (O)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합니다.
- ② (X) 제시된 그래프는 비례세 방식을 나타냅니다.
- ③ (X)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과세대상 금액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 ④ (X)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세율을 부담하므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9. X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음에서 X재의 균형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이 상품은 정상재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 ① X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 하락
- ②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향상
- ③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 ④ 해외로부터 X재 수입의 증가

19. [경제 3단원] 시장 균형의 이동

[정답] ③

[해설]

X재의 균형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 거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X재의 공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수요의 변화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공급의 변화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① (X) X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X재의 균형 가격 및 균형 거래량 모두가 감소합니다.
- ② (X) X재가 정상재이므로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X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X재의 균형 가격 및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합니다.
- ③ (O)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X재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X재의 균형 가격은 올라가지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 ④ (X) 해외로부터 X재의 수입이 증가한다면 결국 X재의 공급자가 증가하는 결과가 되어 X재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X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20. 다음 ㉠ ~ ㉢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A국: 생산가능인구(노동인구) 10,000명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40%일 때, 실업자가 (㉠)명이면 고용률은 (㉡)%이다.
B국: 실업률이 2%이고 실업자가 300명일 때, 생산가능 인구가 (㉢)명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가 된다.

- | | ㉠ | ㉡ | ㉢ | ㉣ |
|---|-----|----|--------|----|
| ① | 200 | 58 | 30,000 | 55 |
| ② | 300 | 57 | 25,000 | 60 |
| ③ | 300 | 63 | 25,000 | 60 |
| ④ | 200 | 62 | 30,000 | 55 |

20. [경제 5단원] 고용 관련 지표

[정답] ②

[해설]

구분	의미
경제 활동 참가율(%)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취업률(%)	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 갑국의 경우 비경제 활동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의 40%이므로 4,000명이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분류되므로 나머지 6,000명은 경제 활동 인구가 됩니다. 이때 실업자 수가 ㉠ (200)명인 경우에는 취업자 수가 5,800명이 되므로 고용률은 ㉡ (58)%가 됩니다. 또한 실업자 수가 ㉠ (300)명인 경우에는 취업자 수가 5,700명이 되므로 고용률은 ㉡ (57)%가 됩니다.

· 을국의 경우 실업률이 2%이고 실업자 수가 300명이라면 경제 활동 인구가 15,000명이 됩니다. 이때 생산가능 인구가 ㉢ (30,000)명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 (50)%가 되며, 생산가능 인구가 ㉢ (25,000)명이라면 경제활동참가율은 ㉣ (60)%가 됩니다.